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태국에 재생치료제 ‘글로벌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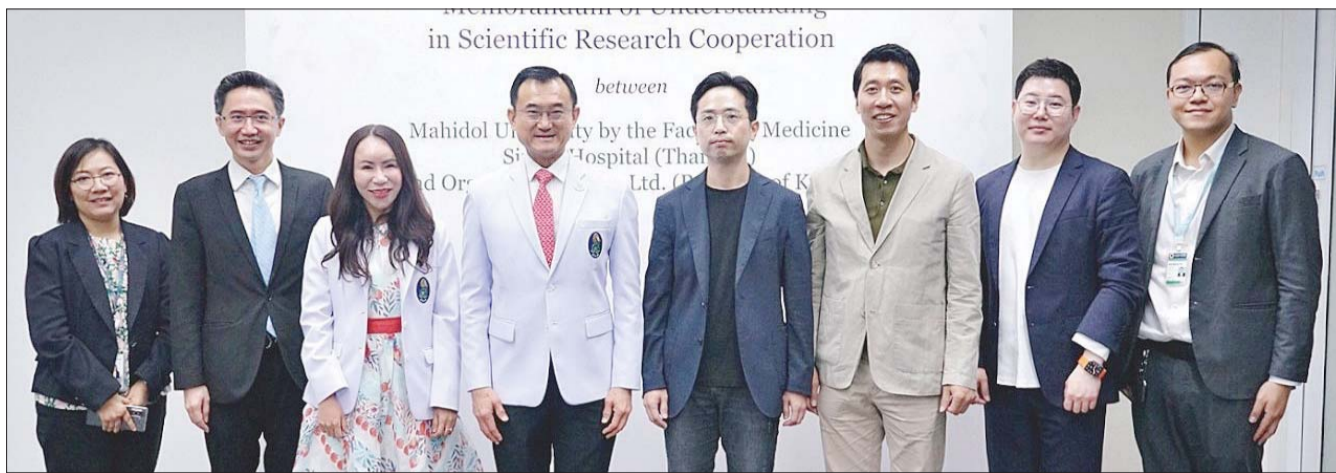
마히돌대학교 시리랏 병원과 맞춘 바이오기술·재생의료 도입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 프로젝트 수행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선도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ORGANOID SCIENCES)가 태국에 재생치료제 글로벌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첨단 재생의료 관광으로 명성이 높은 태국을 재생치료제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태국 마히돌(Mahidol)대학교 시리랏(Siriraj) 병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태국 내 합작 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주도할 인물로 태국 바이오 연구를 선도하는 솀폰나트 삼파트타와니치(Sompornnat Sampattavanich)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腸) 재생치료제



태국에서 열린 마히돌대 시리랏 병원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업무 협약식에서 시리랏병원 아피차트 아사와몽콜쿤(Apichat Asavamongkolkun) 시리랏 병원장(왼쪽 네번째)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톰(ATORM)-C를 비롯한 다양한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를 태국에 도입하고, 태국을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재생치료제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은 연간 수백만 명의 해외 환자가 찾는 의료관광 허브로, 첨단 바이오·재생의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의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히돌대학교 산하 시리랏 병원과 라마티바디 병원은 중개 의학 연구를 선도하며, 태국 정부와 협력해 최첨단 바이오기술 및 재생의료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아세안-코리아 바이오 헬스 네트워크 데이 2025’에서 마히돌

대학교 총장과 태국 주요 병원 관계자, 한국 주재 태국 대사를 초청,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을 동남아 및 중동을 연결하는 재생의료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솀폰나트 교수는 “재생치료제 아톰-C의 개발에 태국 식품의약품(FDA)의

첨단재생의료 제품(ATMP) 규제 프레임워크가 매우 적합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태국 바이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치료제 도입을 넘어, 태국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태국 바이오산업 발전과 의료관광 시장 연계를 통해 동남아 및 중동을 아우르는 재생의료 허브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을 동물대체시험 허브로, 태국을 재생치료제 허브로 육성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혁신적인 동물대체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의료관광과 연계한 재생치료제 상용화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홈플러스 “정산 문제없어”... 대금 밀린 협력사는 “불안”

이마트 정산주기 평균 25일 내외
홈플러스는 납품 후 45~60일
일부 협력사, 주기 축소 등 요구

홈플러스 “정산주기 30~45일
주기 축소 관련해 논의는 없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금 정산이 밀리면서 협력업체 사이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납품대금 정산 주기가 이마트, 롯데마트보다 길어 정산 지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산 주기가 평균 25일 내외이고, 롯데마트는 20~30일 것에 비해 홈플러스 정산 주기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상품을 납품받고 통상 45~60일 이후에 정산하는 흐름이라는 것.

대형마트업계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는 상품군, 계약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선식품의 경우 거래 빈도가 많아 빠른 정산이 이뤄지는 반면, 일반 가공식품 및 공산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직매입, 위탁판매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서로 정산 주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홈플러스 정산 주기가 더 긴 만큼 불안감을 느낀 일부 협력사 관계자는 납품 정산 주기 축소와 정산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미정산 상황에서 정산 주기가 긴 현재의 계약 방식을 지속하기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대금 정산 주기가 특별히 길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정산주기는 평균(45일에서 60일이 아닌) 30일에서 45일이다”라며 “타 경쟁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대금 정산 주기 축소 요구에 관해서는 “현재 대금 정산 지급은 되고 있는데 (정산 주기 축소) 관련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대금 정산 주기 외에도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납품업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대금만 변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며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 당장 운용할 자금이 없어진다. 이를 버티는 과정에서 또 대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일반상거래 채권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순으로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해 법원의 승인 없이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며,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해 법원의 승인 후 변제되는 채권을 뜻한다.

추가 대출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회생채권 변제 허가 승인을 내린 것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계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인구 1만7432명 ↓... 2년10개월 새 최대폭 자연감소

행안부, 지난달 출생아 2만1225명 사망자 3만8657명 34개월 새 최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83.6%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2년 1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다른 달 평균과 비교해 변동이 작았으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령층이 80% 넘게 차지했다.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출생 통계는 2020년대 들어 2만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사망자 수는 2022년 4월(4만985명)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많

은 3만8657명에 달했다. 출생 통계에서 사망 통계를 뺀 자연증감분(자연감소) 역시 -1만7432명으로 34개월 사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 2만 5554명까지 내려왔으나 8월 3만412명, 10월 3만1162명, 12월 3만1453명, 올해 1월 3만2605명 등 완만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러다 2월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월 사망자(3만8657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수는 3만2340명이었다. 고령층 사망이 3만 선을 넘어선 것은 관련(연령대별)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23년 1월 이래로 처음이다. 지난달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83.6%를 기록했다.

한편, 고령층의 사망이 늘었지만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20.2%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유엔(UN)이 규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0.0%)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노인 비중이 0.2%포인트(p)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15~64세 나이가 속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69.2%로 내려앉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10년 전인 2015년 2월(73.2%)에 비해 4.0%p나 떨어졌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12.8%에 머물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치권 “경제상황 맞는 근본대책 제시를”

>> 1만 ‘폐업공화국 위기’서 계속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정국정협의회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린 세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이런 가운

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중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